

##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

2021. 6. 18.

관 계 부 처 합 동

### 순 서

I. 추진 배경 .....	1
II. 어음발행 추이 및 개선방향 .....	3
III. 추진 전략 .....	6
1.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.....	7
2.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.....	8
3. 상생결제 확산 .....	8
4. 거래 안전망 확충 .....	9
5.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 .....	10
IV. 추진일정 .....	11

## I. 추진배경

- 정부는 **결제기간 장기화, 연쇄부도 위험** 등을 감안하여 **어음의 단계적 폐지**를 추진 중

\* 100대 국정과제 中 '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'의 실천과제

- **그간 제도 개선 노력\***과 더불어 **전자식 대체 결제수단의 보급 확대**로 **어음의 발행 및 유통 규모는 크게 감소**

\* 상생결제 도입('15), 전자어음 만기 단축('18),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시행('19) 등  
<목적별 어음 발행 추이(단위: 조원)>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
전체	1,284.8	1,209.2	1,170.8	1,191.5	1,184.7	1523.4
진성어음	<b>139.5</b>	<b>113.8</b>	<b>96.7</b>	<b>106.9</b>	<b>82.0</b>	<b>76.1</b>
유통어음	1,145.3	1,095.4	1,074.1	1,084.6	1,102.7	1447.3

\* (진성어음) 기업간 상거래시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  
(유통어음)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고, 기업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

- 다만, 수취한 어음의 **대금회수가 지연**되거나, **대규모 연쇄부도 및 사기** 등 어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

\* ('17) S서적의 688억원의 부도로 중소형 출판회사 1,000여개 피해  
( '19) H사 협력업체에서 미회수 물품대금 1,000억원 발생  
( '20) S사 협력업체에서 미회수 대금 1,748억원 발생

-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, 어음 등 **상거래 결제수단 개선**을 위한 **정책추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**

- 특히, 코로나19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단순 폐지보다는 **부작용 최소화 및 대체 수단 활성화** 추진 필요

⇒ **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어음의 전면폐지보다는 대체수단 활성화로 어음 발행과 유통의 자연감소를 유도**

## <참고 : 그간의 추진 정책>

### ① 전자어음 활성화

- (**전자어음 발행대상 확대**) 거래 투명성 제고, **종이어음 발행 축소** 등을 위해 **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조치**(\*('14.4월))

\*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: ('09) 외감법인→ ('14) 자산총액 10억원이상 법인

\*\* 전자어음은 발행·배서·결제 등 거래정보가 관리기관(금융결제원)에 집중, 관리되므로 종이어음에 비해 안전

- (**결제기간 단축**) **전자어음의 만기를 6개월('18.5월) → 3개월('21.6월)로 단계적 단축**(6개월에 1개월씩)하여 **납품대금 조기회수** 유도

\* 중소기업 수취 전자어음 평균 회수 기일(일, 금융결제원) :  
( '17) 95.2 → ('18) 92.3 → ('19) 89.1 → ('20) 84.1('17대비 △11.1일, 11.7%↓)

<시기별 최장 만기 적용>

만기	6개월	5개월	4개월	3개월
구분	'18.5.30~'19.5.29	'19.5.30~'20.5.29	'20.5.30~'21.5.29	'21.5.30~

### ②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확대

- (**상생결제 활성화**) 구매기업(대기업·공공기관)이 상생결제\* 이용시, 1차 협력사도 2~3차 협력사에 어음 지급 대신 현금 또는 상생결제 지급 의무화('18.9월)

\* 외상매출채권 기반 결제시스템으로,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하여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, 결제일 전에도 구매기업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

— 상생결제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확대(58개 → 135개, '20.9월)하고, 세제혜택을 중견기업으로 확대('17.12월)

- (**매출채권보험 확대**) 외상거래 건전성 제고를 위해 **보험인수 확대 및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제도 신설**('19.6월)

\* 인수실적(조원) : ('16) 18.0 → ('17) 19.7 → ('18) 20.2 → ('19) 20.1 → ('20) 20.3  
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지원실적(억원) : ('19) 4,199 → ('20) 5,571

## Ⅱ. 어음발행 추이 및 개선 방향

### 1. 어음발행 추이

- (발행) 어음의 발행규모는 '15년 139.5조원에서 '20년 76.1조원으로 45.5% 감소(63.4조원↓)
- 특히, 종이어음 발행은 '15년 41.9조원에서 '20년 4.2조원으로 빠르게 감소(90.0%↓)

진성어음 결제현황(조원)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
진성어음	139.5	113.8	96.7	106.9	82.0	76.1
전자어음	97.6	91.1	91.5	101.8	78.1	71.9
종이어음*	41.9	22.7	5.2	5.1	3.9	4.2

\* 종이어음은 결제액 기준 표본 추출방식으로 산출된 추정금액(금융결제원)

- (수취) '20년 기준 산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음 수취 비중은 각각 12.0%, 2.7% 수준
- \* 금융이용실태조사: '20.12월~'21.1월 중소기업(520개), 소상공인(1,000개) 표본조사
- (부도) '20년 기준 어음 부도 금액은 5,826억원(부도율 0.81%)으로, 어음 부도액과 부도율 모두 감소세 지속

진성어음(전자)의 부도 추이(금융결제원)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
부도금액(억원)	12,423	9,680	8,305	9,438	7,222	5,826
부도율(%)	1.27	1.06	0.91	0.93	0.93	0.81

- (대체 수단) 전자외상매출채권 등 대체 결제수단은 '20년 525조원으로 '15년 대비 131조원(33.4%) 증가
- '20년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진성어음 결제액의 약 7배 수준

(단위 : 조원, 금융결제원)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
전자외상매출채권	366.6	374.4	416.7	418.4	415.4	403.5
전자채권	2.9	2.7	2.8	2.7	2.5	2.2
상생결제	24.6	66.7	93.6	107.4	115.6	119.9
계	394.1	443.8	513.1	528.5	533.5	525.6

\* 기타 결제성 여신(기업구매 자금대출, 기업구매카드 전용카드 등) 132조원 제외('20년)

## 2. 미흡한 점 및 개선 방향

### ① 종이어음의 폐해 상존

- 종이어음은 이용량은 적지만 배서횟수 등에 제한이 없어, 고의 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
- \* 수취어음 종류별 비중(%) : (전자어음) 80.4, (종이어음) 3.9, (전자·종이 모두) 15.7% (중기중앙회, '20.12월)

◇ (시사점) 구매기업이 부도 시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있어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전자어음으로 대체 필요

### ② 전자어음 만기단축에도 불구하고, 긴 현금 회수 기간

- 전자어음의 만기단축(180일 → 90일)에도 불구하고, 수취기일이 포함된 총 회수기일(112.3일)은 길어, 상거래 대금의 조기 현금화 애로

결제수단별 현금화 소요 기일

구 분	수취기일(a)	결제기일(b)	총 회수기일(a+b)
현금	34.1	-	34.1
대체 결제수단	29.5	51.3	80.8
어음	37.0	75.3	112.3

\* 수취기일: 제품 판매한 날로부터 현금, 대체 결제수단, 어음을 받기까지 소요기간

\* 결제기일: 대체 결제수단, 어음을 수취한 날로부터 만기일(결제일)까지 소요기간

◇ (시사점)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서는 어음의 만기일 단축 추진과 더불어, 수취기일 단축에 대한 논의 필요

###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담보대출에 대한 부담 존재

-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\*은 판매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어음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('20년 37.2조원)
- \* 구매기업이 물품을 납품받은 후, 거래은행을 통해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,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('01년 도입)

- 다만,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, 은행이 판매기업에 기존 대출금을 회수(상환청구권 행사)하여 판매기업 경영악화

\* 외담대 거래 피해사례(E사)

- '14년 E사에서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이 미결제되면서,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160개 중소기업체가 외담대 289억원을 은행에 대신 상환하게 되는 연쇄적 피해 발생

-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, 폐지 시 오히려 은행의 대출 기피로 판매기업의 자금조달 악화 가능성 제기\*

- \*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관련 은행권 의견조회('21.3월, 금감원) : 상환청구권 폐지 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

◇ (시사점) 민관 협업을 통해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혁신금융 서비스 도입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필요

4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에도 불구하고, 2~3차 협력사 낙수효과는 미미

- 상생결제가 구매기업(대기업 및 공공기관)과 1차 협력사 간 거래 위주로 이루어지고, 2차 이하 업체로 이전되는 결제 비중은 극히 일부\*

- \* 2차 이하 상생결제 비율(%) : ('17) 1.1 → ('18) 1.2 → ('19) 1.5 → ('20) 1.8

- 2차 협력사에게 건설노무비 직접지급 시스템이 부재하여 건설 협력기업의 인건비 등 어려움 가중

- \* 「하도급지킴이」시스템(조달청)은 '건설산업기본법'에 따라 건설업체 이용 의무화(3천만원이상) 및 1차 이하 거래처 현금지급 의무화('20년 총 지급실적 43.4조원)

◇ (시사점) 상생결제의 이점 확산을 위해, 1차 협력사에 비해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결제 결제비율 확대 필요

▶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음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

▶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단점 보완 및 활성화로 안정적인 상품거래 및 원활한 대금결제 여건 조성

### Ⅲ. 추진전략

#### < 비 전 >

#### 대·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

##### 목표

##### 어음대체 수단 활성화를 통한 현금성 결제 확대

- ◆ 전자어음 발행대상 확대(28.7→78.7만 개사) 및 종이어음 제로(無)
- ◆ 상생결제(120→150조원), 팩토링 도입 등 어음대체수단 활성화

##### 어음 제도 개선

#####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

- ①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확대
- ② 종이어음 자연감소 유도 및 폐지 추진

#####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

- ③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및 수취기일 단축
- ④ 대·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

##### 세부 추진 과제

##### 상생결제 활성화

- ⑤ e호조와 상생결제 연동 추진
- ⑥ 예치계좌 압류 방지 및 지방공기업 평가
- ⑦ 중소기업 ERP시스템 연계

##### 거래 안전망 확충

- ⑧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
- ⑨ 구매자금 지원 강화

##### 핀테크 기반 혁신금융 개발

- ⑩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
- ⑪ 혁신금융 활성화

## 1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

### □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

- (1단계) 금년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(28.7만개 적용)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(40만개 적용)으로 확대('21년,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)

- (2단계) 모든 법인사업자(78.7만개 적용)로 확대하고,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('23년, 전자어음법 개정)

\*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(회) : ('17) 0.97 → ('18) 0.95 → ('19) 0.93 → ('20) 0.85

\*\* 배서횟수별 부도율('20년, %) : (0회) 0.45, (1회) 0.86, (2회) 1.28, (3회) 1.74  
(5회) 2.17, (7회) 2.74

구 분	현 행	1단계('21.9월)	2단계('23년)
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감법인</li> <li>자산 10억원이상 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감법인</li> <li>자산 5억원이상 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모든 법인사업자</li> </ul>
대상기업수 ('19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8.7만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0.0만개 (현행대비 1.4배 ↑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78.7만개 (현행대비 2.7배 ↑)</li> </ul>
조치사항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어음법 개정 · 배서횟수 한도 축소</li> </ul>

### □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, '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추진

\* 일본의 경우 '26년까지 종이어음 폐지, 60일로 어음만기 단축 등 정책목표 수립  
(경제산업성, 약속어음의 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검토회 보고서 '21.3.3)

## 2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

### □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

- (만기단축)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 및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(전자어음법 개정, '22년)

- (수취기일 단축)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(대체결제 포함)으로 납품대금 지급시,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「공정거래협약」 개정 추진('22년)

### □ 대·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

-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, 대·중견기업\*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,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  
(하도급법·상생협력법 개정)

\* 대기업('22) → 중견기업('23) 등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추진

## 3 상생결제 활성화

- '22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, 인센티브 부여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

\* 상생결제 실적 및 목표(조원) : ('19)115.6 → ('20)119.9 → ('21<sup>9</sup>)130 → ('22<sup>9</sup>)150

### <상생결제 실적>

(단위 : 조원, 건, 개사, 누적)

구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결제금액	24.6	66.7	93.6	107.4	115.6	119.9
구매건수	188,674	569,371	737,304	838,262	949,406	984,530
구매기업수	157	207	230	265	292	326

- (지역확산)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e호조\*와 상생결제를 연동하고, 2차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 추진('21년)

\* e호조(지방재정관리시스템) : 지자체 재정계획, 예산편성, 지출, 결산 등 재정업무 전 과정 종합지원

- (인센티브) 예치계좌 압류방지\*,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'상생결제 도입 및 이용노력' 반영('21년) 추진

\*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추진('21년, 상생법 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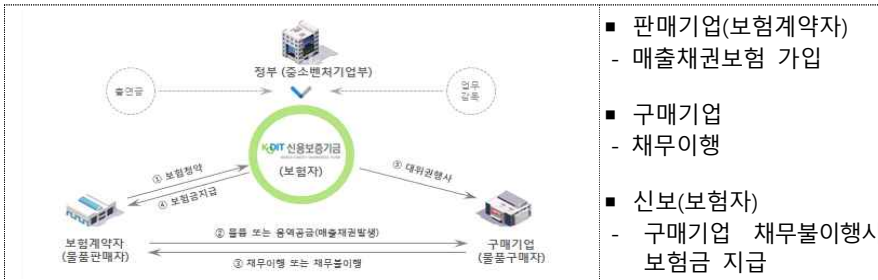
- (편의성 제고)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(ERP) 시스템\*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 추진('22년)

\*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: 기업 재무회계, 구매 등 경영자원 관리시스템

#### 4 거래 안전망 확충

- (매출채권보험) 신보의 인수규모를 '22년 20조원 이상으로 확대\*

\* 인수 계획(조원) : ('16) 18.0, ('17) 19.7, ('18) 20.2, ('19) 20.1, ('20) 20.4, ('21) 20.0



- (구매자 금융) 신·기보에서 운영중인 구매자금융 보증\*을 '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('20년 6.3조원)하여 현금결제 비중 확대

\* 구매자 금융 : 구매자가 용자를 받아 판매자에게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금융으로, 구매자금융보증, 담보여음보증 등을 포함 ('20년 신보 5.6조, 기보 0.7조)

#### 5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

-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

-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평가시스템 활용하거나 민간핀테크와 연계하여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추진\*

\*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중진공 및 기보의 시범사업('22년) 추진 후 운영성과 분석을 거쳐 '23년 이후 공급규모 확대 검토('23년~), (신보는 '21년 시범사업 추진중)

- 정책금융기관(중진공·신보·기보)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대상기업, 심사 방법 등에 집중하여 차별적 팩토링 상품 운영 → 민간으로의 확산 유도

- (중진공) 기업간 거래내역 등을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팩토링 공급

\* (예시) 민간의 핀테크기업과 중진공의 인공지능 평가시스템과 접목하여 추진



- (신보) 중견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공급
- (기보) 신용도가 中·低수준이지만, 기술·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 사업자를 중심으로 팩토링 공급

\* 신기술평가시스템 및 온라인 플랫폼의 상거래정보 등을 연계하여 평가 후 팩토링 제공대상 선정

-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

-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·금융 서비스를 개발·제공 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지원

-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·융자 및 R&D 지원 확대

\* '20년 지원 실적(억원) : 투자(235), 융자(41), R&D(27)

## IV. 추진일정

### □ 부처별 과제 및 일정

구분	정책과제	일정	부처
어음 제도 개선	<b>1.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</b>		
	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	'21.9월	법무부
	전자어음 배서 횟수 축소	'23년	법무부
	종이어음 자연감소 및 전면폐지	'23년	법무부
	<b>2.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</b>		
	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	'22년	법무부
	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수취기일 단축	'22년	공정위
	대·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	'22년	중기부 공정위
어음 대체 수단 활성화	<b>3. 상생결제</b>		
	e호조와 상생결제 연동 추진	'22년	행안부 중기부
	예치계좌 압류방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	'21년	중기부
	중소기업 ERP시스템 연계	'22년	중기부
	<b>4. 거래 안전망 확충</b>		
	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 확대	'22년	중기부
	구매자금융 지원 강화	'21년	중기부 금융위
	<b>5. 핀테크 기반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</b>		
	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	'21년	중기부 금융위
	혁신금융 활성화	'21년	중기부 금융위